"이러니 쇠고기 못 믿지…"

식용접착제로 수입산을 국산에 붙여 팔고 양념 섞어 눈속임

광주·전남 두달새 국산 둔갑 등 17건 적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수입육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에 붙여 팔거나, 눈속임을 위해 수입산 쇠고기를 양념과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례도 여전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과 6월(20일~24일) 2차례에 걸쳐 각각 5일간 면적이 300㎡ 이상인 도내 쇠고기 취급 120개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총 11건을 적발했다. 광주시도 모두 141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5건, 원산지 허위 표시 1건 등 6건을 단속했다.

도는 순천지역 한 업소의 판매가가 타 업소에 비해 낮은 데 대해 수입산 쇠고기나 국내산 젖소 등을 국내산 한우 양념육이라고 속여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산지 판별을 위해 판매한 쇠고기를 수거, 식약청에 DNA 검사를 요청했다.

진도 A음식점은 국산 쇠고기를 팔더라도 '원산지 : 국내산 한우'라고 표시, 원산지(국내산, 호주산, 미국산)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한우라고만 표기했다. 이 같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3건이었다.

특히 광주의 H업소는 미국산 쇠고기 500g을 국산 한우와 호주산 수입육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7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이 업소는 식용 접착제를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갈빗살에 덧붙여 한우 양념갈비로 속이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500g 가량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H업소 등 5곳은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시정조치됐다.

이들 업소는 쇠고기를 공급하는 중간거래처가 원산지 증명서를 건네주지 않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화된 단속 기준(지난 22일부터 100㎡ 이상으로 업소)과 다음달 말부터 단속이 모든 업소로 확대되는 기준을 감안하면, 이같은 위반행위 적발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쇠고기를 취급하는 이들 업소 조차 원산지증명서를 믿는 것 외에는 한우와 수입육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도축 단계에서부터 중간유통, 소비단계까지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25일 오후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장관고시를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비상시국회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

내달 2·5일 대규모 촛불집회

광주·전남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규모 촛불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시국회의는 2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장관고시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와 같다"며 "광주·전남 전역에서 다음달 2일과 5일 이명박 정부의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검역주권 회복,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등 중요 쟁점들을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적절한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5일 촛불문화제 이후부터 정부의 장관고시 저지 철야농성을 가질 예정이며, 오는 27일 오후 4시에는 광주YMCA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향후 촛불집회 방향, 정권 퇴진 운동 전개, 촛불집회 상설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26일 오후 2시 금남로 가톨릭 센터에서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전면재협상 촉구와 고시 강행 철회를 위한 천구교 2차 시국선언'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현주·강필상기자 kps@

김남일 광주시의원 구속

복지법인 인·허가 비리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 등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광주시의회 김남일(60) 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유승룡 부장판사(영장전담)는 25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남일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여·48)씨에게 '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뒤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뒤 토지매입 비용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4천500만원과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구직 희망자에게 '은행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알선비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의원은 자신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모 은행이 광주시 금고로 지정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은행 측에 기능직 여직원의 취업을 요구한 뒤 취업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정섭 담양군수 사전영장 청구

인사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인사청탁 대가와 관급 자재 납품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담양군수로 당선된 뒤 같은 해 6월, 10월, 12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승진 대상 공무원 등으로부터 모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자신의 친형의 사돈으로부터 1천만원, 공무원 A씨로부터 1천만원, 공무원 B씨의 아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또 군수 취임에 앞서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문중으로부터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군수에게 승진 또는 채용을 청탁한 이들은 모두 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사청탁과 관급 자재 납품 대가로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죄 명백함에도 소모적 재판 청구 피고인들에

광주지법 "소송 비용도 물어라"

대학 동문·총학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광주지역 일부 대학에서 선배와 총학생회 등을 사칭한 금품요구 사기 전화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광주 C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사회와 인문계열 학과 사무실 등에 선배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태국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선배"라며 100여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C대학의 경우 총학생회 간부를 사칭,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학생회비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상필기자 camus@

유죄가 명백함에도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국선변호비용 25만원·증인 3명에 대한 여비 9만원 등 소송비용 34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모(53)씨에 대해서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34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에 대해서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28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중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적극적으로 다퉜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 방어권 행사가 남용된 경우 벌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 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채직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현장에 남긴 휴대전화로 절도 덜미

쌍나팔

○…광주시내 상가 200여 곳에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10대 대도(大盜)(?)가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때문에 경찰에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25일 광주시내 상가에 몰래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김모(15)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군은 지난달 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상가 내에서 정모(43)씨의 식육점에 침입해 현금이 든 금고를 훔쳐 가는 등 최근까지 200여 곳에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출입문을 열고 금고를 갖고 나오는데 수십초면 되지만 무인경비의 경우 최소 5분 이상 걸린다. 시내 상가는 죄다 내가 털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